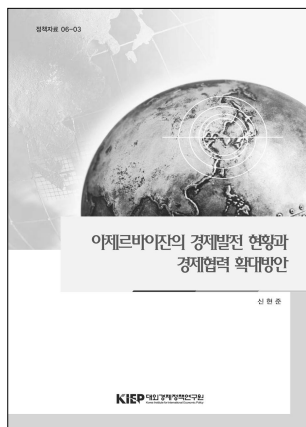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저자 신현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 및 산업의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으로 2005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26.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경제성장의 최대 원동력은 카스피해 연안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석유 및 가스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GDP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전략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추가투자 및 개발과 함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첨단 IT 산업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최근의 고성장, 풍부한 에너지자원, 친시장적인 투자환경 등으로 인해 시장성과 성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2006년 5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국빈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는 등 최근 한국에서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단기적으로는 20%, 중장기적으로는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낮아 향후 한국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풍부한 석유 및 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일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물류 허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제관계는 그 가치에 비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한·아

제르바이잔 교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무역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에너지·자원 분야 및 통신·IT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향후 양국 경제협력 발전의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높은 시장성과 성장성을 가진 신흥시장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수입품 발굴작업, 체계적인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책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교역 불균형 해소 및 교역 확대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IT, 건설, 운송 등 첨단산업 및 인프라 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신흥시장이면서도 시장접근성이 뛰어나 경쟁력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적투자처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에서 기업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정부간 대화 및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정부간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무역 및 투자 보호에 관한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 기업들에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의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공급원으로 유망하다. 한국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일본 등 선발주자들과 경쟁해야 하며,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정책의 최종의사결정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 고위급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류가 절실하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한국에 석유 및 가스 개발권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이 자국의 산업다각화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 확대과정에서 한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유·무상 원조 강화, 문화교류 활성화, 경제발전 경험 전수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이는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